



후쿠오카 한·중·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

정 형 곤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장 (hgjeong@kiep.go.kr, Tel: 3460-1127)

오 용 협 국제거시금융실장 (yho@kiep.go.kr, Tel: 3460-1022)

노 유 연 국제개발협력센터 동북아경제협력팀 연구원 (yynoh@kiep.go.kr, Tel: 3460-1045)

김 연 실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(ykim@kiep.go.kr, Tel: 3460-1187)

1. 서론
2.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 경과 및 협력사업 현황
3. 후쿠오카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 결과
4. 평가 및 향후과제

주요 내용

- ▶ 한·중·일 3국 정상은 지난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3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.
- ▶ 이번 한·중·일 정상회의는 최초의 별도 정상회의로, 향후 회담 정례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음.
- ▶ 또한 이번 회의에서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, 향후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양자 또는 3자간 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며, 이는 향후 3국간 경제협력 및 장기적 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.
- ▶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국 지도부의 정책변화, 3국간 정치체제의 차이, 과거사 문제, 중·일 간 경쟁관계 등의 장애요인으로 협력 추진의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- ▶ 향후 한·중·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, 특히 내년에 설립될 3국 협력의 사이버사무국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공식 사무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.
- ▶ 또한 우리가 중국과 일본간 경제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또는 한·중·일 3자간 FTA 체결방안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 - 한·중 FTA, 한·일 FTA, 한·중·일 FTA와 관련해서는 국가별 상황으로 인해 조기 추진이 어려우므로, 한·중·일 FTA의 경우 산관학 연구를 우선 촉진시키고 3국간 투자관련 협정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▶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세부 협력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1. 서론

- 한·중·일 3국 정상은 지난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정상 회담을 열고 3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.
- 이번 정상회담은 2007년 11월에 열린 ASEAN+3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·중·일 정상회담에서 3국간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에 따른 것임.
- ASEAN+3과는 별도로 최초로 열린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하였고, △ 한·중·일 3국 동반자관계 구축, △ 국제금융 및 경제 분야의 협력 추구, △ 한·중·일 3국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등 공동선언과 △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·중·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음.
- 이번 한·중·일 정상회담은 향후 동북아 역내 안정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통합논의 등 국제사회에서 3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.
-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과 의미를 파악해 보고, 향후 한·중·일 3국의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.

2.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 경과 및 협력 사업 현황

가.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 연혁 및 경과

-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ASEAN+3 정상회의시 일본 오부치 총리의 제의로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이후, 2000년 2차 회의를 계기로 정례화되었으며, 현재까지 8차례 개최되었음.
- 2001년까지는 조찬을 겸한 비공식회의로 개최되었으나, 2002년부터는 공식회의로 격상되어 진행되고 있음.
-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는 당초 ASEAN+3 틀 내에서 느슨한 형태로 시작되었으나, 점차 공식화되면서 3국간 경제협력 추진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.
- 「한·중·일 협력에 관한 3국 정상 공동선언(2003)」 및 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「행동전략(2004)」이 채택되면서 3국간 경제협

력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음.

- 2004년부터 정상회의는 한·중·일 3자위원회¹⁾에서 준비한 '실적보고서'를 통해 이전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하였음.

표 1. 역대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 주요성과

	일시 및 장소	주요 성과
1차	1999.11.28 필리핀	•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 최초개최
2차	2000.11.24 싱가포르	• ASEAN+3 정상회의시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
3차	2001.11.5 브루나이	• 3국 '외교장관 회의', '경제통상장관회의', '재무장관회의' 등 장관급회의 신설 및 연례개최 합의
4차	2002.11.5 캄보디아	• 3국 정상회의 공식화 합의
5차	2003.10.7 인도네시아	• '한·중·일 협력에 관한 3국 정상 공동선언' 채택 • 공동선언 후속조치를 위한 '3자 위원회 구성'
6차	2004.11.29 라오스	• '3국 정상 공동선언' 이행촉진을 위한 '행동전략' 채택 승인 • 3국 협력 '실적보고서' 채택 승인(제1차)
7차	2007.1.14 필리핀	• 3국 협력 '실적보고서' 채택 승인(제2차) • 한·중·일 투자협정 협상 개시 합의
8차	2007.11.20 싱가포르	• 한·중·일 정상회의 별도개최 합의 • 3국 협력 '실적보고서' 채택 승인(제3차) • '한·중·일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' 작성, '사이버 사무국 설치' 등 13개 신규사업 채택

주: 2005년은 동년 10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따른 역사인식 문제로 개최되지 않음.

나. 한·중·일 3국 협력 현황

- 한·중·일 3국은 1990년 이후 무역 및 투자 등 경제적 분야에서 상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가능성적 경제통합이 진전되어 왔음.
- 한·중·일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 12.7%에서 2007년 21.6%로 증가하였음.
- 2007년 현재 한국의 교역대상국에서 중국과 일본이 각각 제1위

1) 3국간 공동선언상의 협력활동을 연구, 계획, 조정,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(각국 외교장관이 수석대표), ASEAN+3 계기 한·중·일 정상회의 직전 개최됨.

및 제3위를 차지하고,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제위 교역대상국이며,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각각 제2위 및 제3위 교역대상국임.

- 3국간의 투자는 한국과 일본이 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으며, 1990~2007년 중 한국과 일본의 대중투자는 각각 2억 6천만 달러 및 17억 달러에서 71.8억 달러 및 62.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, 특히 한국의 대중 투자는 그 증가세가 두드러짐.

표 2. 한·중·일 3국간 교역추이

구분		1992	2000	2007	
수출	한국	중국(억 달러)	26	185	820
		일본(억 달러)	116	205	264
		비중(%)	18.4	22.6	29.2
	중국	한국(억 달러)	24	113	561
		일본(억 달러)	117	417	1,021
		비중(%)	16.5	21.2	13.0
	일본	한국(억 달러)	188	307	564
		중국(억 달러)	120	304	1,136
		비중(%)	8.8	12.8	22.9
수입	한국	중국(억 달러)	37	128	630
		일본(억 달러)	195	318	563
		비중(%)	27.9	27.8	33.4
	중국	한국(억 달러)	26	232	1,040
		일본(억 달러)	137	415	1,339
		비중(%)	19.9	28.7	24.9
	일본	한국(억 달러)	116	205	284
		중국(억 달러)	170	552	1,329
		비중(%)	12.3	19.9	24.9
총 교역	한국	중국(억 달러)	64	313	1,450
		일본(억 달러)	311	523	826
		비중(%)	23.4	25.1	31.3
	중국	한국(억 달러)	51	345	1,602
		일본(억 달러)	254	832	2,360
		비중(%)	18.2	24.8	18.2
	일본	한국(억 달러)	294	512	848
		중국(억 달러)	289	855	2,465
		비중(%)	10.2	15.9	23.8

주: 비중은 각국의 총 교역액 중 역내국가가 차지하는 비중
 자료: UN COMTRADE

■ 이와 같은 긴밀한 경제관계에 따라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, 그간 ASEAN+3 계기 한·중·일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외교장관 회의 및 분야별 고위급 협의체 운영을 통해 경제통상, 에너지, 환경, 문화·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.

- 2008년 현재 각 협력분야별 실무자급 협의체 등 약 총 44개의 정부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음.

-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1) 경제·통상 분야

■ 한·중·일 FTA 민간공동연구는 1999년 제차 한·중·일 정상 회담시 한국측의 제안에 따라, '한·중·일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출범 이후, 2003년부터 3국간 FTA와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.

- 각국의 연구기관²⁾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, 2006년부터는 각국의 업계대표, 2007년부터는 3국 정부관계자가 옵서버로 참여하는 등 연구의 참여폭이 확대되었음.

- 매년 연구결과는 ASEAN+3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의에 보고 되어왔으나, 올해의 연구결과³⁾는 이번에 개최된 별도 정상회의에 보고되었음.

■ 한·중·일 투자협정 협상은 제7차 한·중·일 정상회의(2007년 1월 싱가포르)에서 합의됨에 따라 시작되었고, 2007년 1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, 내년 2월경에 제6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음.

- 또한 투자협정 공식협상시 3국의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된 한·중·일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제도 병행 개최되고 있음.

■ 경제·통상 분야에서의 3국간 협력은 정부간 채널 이외에도 한·중·일 3국 민간 경제계간에서도 두드러짐.

- 한·중·일 비즈니스포럼은 2002년 설립된 이후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,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,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고, 전체 회의 이외에도 섬유, 전자, 기계, 자동차, 석유화학, 철강, 물류, 가스 등 총8개 산업별 분과회의가 진행되고 있음.

2) 외교안보

■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3국간 협력은 ASEAN+3 체제를 토대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 및 3국간 대아프리카 정책대화 창설 등이 대표적임.

2) 한국: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중국: 국무원발전연구중심, 일본: 종합연구개발기구

3) 2008년 공동연구의 주제는 '한·중·일 FTA의 현실적 로드맵 구축에 관한 연구(Possible Roadmaps to a CJK FTA: Obstacles and Expectations)' 임.

- 특히, 지난 12월 12일 일본 동경에서 한·중·일 3국 외교부의 아프리카 담당 국장간 대아프리카 정책대화(Trilateral Policy Dialogue on Africa)가 처음 개최되었으며, 향후 3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.

3) 금융협력 협의체

■ 한·중·일 간 금융협력 협의체로는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금융국장 회의가 정례화되어 개최되고 있으며, 이와 더불어 금년에는 거시경제·금융협의체를 창설에 합의하여 11월 처음으로 「한·중·일 거시경제 금융 안정 워크숍」을 개최한 바 있음. 이외에도 한·중·일 국제연구기관 차원에서 거시금융부문 연례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.

표 3. 한·중·일 금융협력 현황

회의	목적	참여	개최
재무장관 회의	거시경제·금융 정책, 역내 및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 논의	각국 재무장관	매년 1회, 2000년 첫 회의 후 2002년부터 정례화
국제금융국장 회의	주요 국제금융이슈 및 역내 금융협력 과제에 대한 의견 공유	각국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의 국제금융국장	매년 2회, 1999년 첫 회의 후, 2002년부터 정례화
거시경제·금융협의체	3국간 포괄적인 금융정책·감독 공조체제 구축	각국 재정부, 중앙은행, 금융감독기관의 고위관료	2008.11월 최초 개최
KIEP-PRI-CASS ¹⁾ 학술세미나	거시금융부문 국제학술회의	각국 대표 싱크탱크 및 재무부처 관료	매년 1회, 기존 한·일 간 국제 세미나에 2007년 중국이 합류

주: 1)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·일본 재무부 산하 정책연구소(PRI)·중국사회과학원(CASS)

- 한·중·일 재무장관 회의는 2000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의 기간 중 최초로 개최된 이후 정례화되었으며, 주요 의제는 경제통합, CMI 추진 및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, IMF/WB의 출자(지분)비율 증대 등 3국의 역내 지역금융체제 선진화 및 국제적 위상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함.

○ 금년 제8차 한·중·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한·중·일 3국 재무부·중앙은행·금융감독기

구가 참여하는 거시경제·금융안정 협의체 창설에 합의하고, CMI 다자화와 ABMI 추진에 대한 공동 노력에 합의함.

- 한·중·일 국제금융국장 회의는 3국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의 국제금융국장들이 모여 주요 국제 금융이슈 및 역내 금융협력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금융공조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마련한 실무진급 금융협력체임.
- 한·중·일 거시경제·금융 협의체는 금년 제8차 한·중·일 재무장관회의 후 창설된 것으로, 3국의 재정부·중앙은행 외에도 금융감독기관의 고위관료들이 함께 모여, 역내 경제·금융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정책·감독 공조체제를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임.
- KIEP-PRI-CASS 학술세미나는 한·중·일 대표 싱크탱크간 국제거시금융분야 연례 정책토론회로서, 3국의 금융협력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장임.

4) 에너지

■ 에너지 분야의 3국 협력 논의는 '5차 에너지각료급 원탁회의', '동북아 에너지실무협의체', ASEAN+3회의의 계기 '에너지관련정부고위 관련회의 등 다자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
- '5차 에너지각료급 원탁회의는 한국, 미국, 중국, 일본, 인도⁴⁾가 참여하고 있으며, 제1차 회의가 2006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되어 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조체제 구축, 석유비축 확대, 위기시 비축유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, 공동석유 정보체계 참여, 에너지 다변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확대 등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음.

- 에너지 안보확보와 동북아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 주도로 동북아 6개국(한국, 러시아, 중국, 몽골, 일본, 북한)을 중심으로 하는 '동북아에너지실무협의체 구축노력이 추진 중이나, 2005년 11월 개최된 제1차 정부간 회의에 중국과 일본은 불참하였음.

- ASEAN+3 계기 '에너지관련 정부고위관료회의는 2002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, 최근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를 통해 활동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
4) 이들 국가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48%를 차지함.

5) 환경

- 환경분야에서 3국의 협력은 ‘한·중·일 환경장관회의, ‘동북아 환경협력계획, ‘황사대응 한·중·일 국장급회의 등이 진행되고 있음.
- ‘한·중·일 환경장관회의는 한국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, 지난 12월 2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0차 장관 회의에서는 탄소시장 공동연구, CDM(청정개발체제) 활성화 및 기술이전, 동북아시아 황사방지 파트너십 구축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.
- 2007년부터는 장관회의 이전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황사공동연구구단 구성 등 황사대응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.
- 대기, 생태계 분야 등 동북아 지역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‘동북아 환경협력계획은 한·중·일 3국 이외에도 북한, 몽골,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으며, 최근 몽골에서 개최된 제13차 회의(2008년 3월 몽골에서 개최)에서는 황사대응 공동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.
- 「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」은 한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 등 4개국 이 참여하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체로서, 주요사업으로 해양환경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, 지역모니터링 프로그램 설립, 해양오염 대응 지역협력 방안 개발 등이 있음.
-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오염 사고시 중국과 일본 측의 지원 확보에 기여한 바 있음.

6) 문화·인적 교류

- 문화·인적교류 분야의 협력논의는 한·중·일 관광장관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대표적 문화협력사업으로는 한·중·일 문화서틀사업이 있음.
- 2008년 10월 부산과 충북에서 개최된 한·중·일 관광장관회의에서는 3국간 관광교류확대, 공동 관광상품 개발, 청소년교류 촉진 등에 관해 논의한 후 ‘부산선언을 채택함.
- 2007년 6월 제1차 한·중·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된 ‘한·중·일 문화서틀사업은 3국 공동 영화제작, 미술작품 전시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표 4. 주요 분야별 한·중·일 3국간 경제협력

분야	주요 협력사업
경제·통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·중·일 FTA 민간 공동연구 • 한·중·일 투자협정 협상 • 한·중·일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체 회의 • 한·중·일 비즈니스 포럼(비정부간 협력)
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무장관회의 • 국제금융국장 회의 • 거시·경제 금융협의체 • KIEP-PRI-CASS¹⁾ 학술세미나
외교·안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핵문제 관련 • 지역 및 국제문제
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자 에너지각료급 원탁회의 • 동북아 에너지실무협의체 • 기타 국제회의 계기 협력
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·중·일 환경장관회의 •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•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
문화·인적 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·중·일 관광장관회의 • 한·중·일 문화서틀

주: 1)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·일본 재무부 산하 정책연구소(PRI)·중국사회과학원(CASS)

3. 후쿠오카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 결과

-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, 일본 아소 다로 총리는 12월 13일 정상회담에서 3국 현안 및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3국간 협력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, 「한·중·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」에 서명하였음.
- 또한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담은 「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, 「한·중·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, 「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·중·일 3국 공동발표문」을 채택하였음.

가. 한·중·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의 주요내용

- 한·중·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크게 △ 세계금융위기 극복, △ 지역협력체 발전에 기여, △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추구로 정리할 수 있음.
- 먼저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국간 철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협력사항은 ‘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」에 나열되어 있음.

- ASEAN+3, EAS(동아시아정상회의), ARF(아세안지역안보포럼), APEC(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) 등 지역협력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합의하였음.
-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으며,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'한·중·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'에 명기되었음.

나.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의 주요내용

■ 한·중, 한·일 간 양자 통화스왑의 거래규모를 확대 체결하였으며, 이는 한·중·일 3국의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발현된 것임.

- 일본과의 통화스왑 거래규모를 기존의 1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하고, 중국과의 통화스왑 거래규모도 기존의 4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려 체결함.

■ 일본·중국과의 통화스왑 거래규모 확대는 위기상황이 아니라도 평상시 활용할 수 있는 스왑 부문의 구성 비중을 조정하여, 외환시장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통화스왑의 형식이 원/달러 간이 아닌 원/엔 또는 원/위안화 간의 스왑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, 실제 달러유동성 부족문제 해소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긴 하나, 통화스왑 확대가 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■ 다른 시각에서 보면, 이번 통화스왑의 형식은 원/달러 간이 아닌 원/엔 또는 원/위안화로 체결되어, 한·중·일 3국이 자국통화의 스왑거래 규모를 확대하게 됨.

- 이는 3국의 높은 달러의존도를 낮추고, 3국간 자본 및 무역거래에서 자국통화의 사용을 확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, 특히 향후 무역결제에서도 자국통화로의 결제비중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.

표 5. 통화스왑 규모 확대체결

	한·중·일 정상회담 이전	한·중·일 정상회담 이후
한·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30억 달러 - 평상시: 30억 달러 (원화 ↔ 엔화) - 위기시: 100억 달러 (원화 ↔ 달러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0억 달러 - 평상시: 200억 달러 (원화 ↔ 엔화) - 위기시: 100억 달러 (원화 ↔ 달러화)
한·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0억 달러 - 평상시: 해당 없음 - 위기시: 40억 달러 (원화 ↔ 위안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0억 달러 - 평상시: 260억 달러 (원화 ↔ 위안화) - 위기시: 40억 달러 (원화 ↔ 위안화)

■ 이밖에 3국 정상은 역내협력을 위해 CMI 다자화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, G-20에서 합의된 5대 기본원칙에 따른 실행계획(action plan)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실무경제 부양에 힘쓰기로 합의함.

- CMI 다자화와 관련하여, 이번 한·중·일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개최된 제8차 한·중·일 재무장관회의 및 제11차 아시아+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CMI 다자화 합의 수준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음.

- 그러나 향후 한·중·일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아시아통화기금(AMF)의 설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, 공동펀드의 한·중·일 간 분담비율 설정 문제, 펀드에 대한 감시(surveillance)기구 등 아직 미해결 상태인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■ 아울러 아시아 역내통화 안정을 위한 통화바스켓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으며, 궁극적으로 단일통화 등 동아시아 금융통합과 경제통합 논의도 보다 구체성을 띠 것으로 보임.

다. 한·중·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

■ 「한·중·일 3국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」은 2007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8차 ASEAN+3 계기 한·중·일 정상회담에서 작성하기로 합의된 후, 준비되어왔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임.

- '행동계획'에는 총 5개 분야에서 24개의 구체적 세부사업 및 추진 계획이 제시되고 있음.

■ 협력일반

- 그간 개최되어온 ASEAN+3 계기 3국 정상회의와 더불어 3국간 별도 정상회의 정례화를 비롯하여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차관보회의 정례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음.
- 또한 인터넷상의 사이버사무국을 개설하여, 3국간 분야별 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조율 및 일정조정을 담당하도록 하였음.

■ 경제·통상 분야

- 경제·통상 분야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국간 FTA 민간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투자협정 체결을 가속화할 것을 합의하였고 한·중·일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체에서 제시한 액션 어젠다(action agenda)를 채택하였음.
- 금융관계 부처 및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지속하여 금융위기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그밖에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지속, 제3차 한·중·일 물류장관회의 개최(2009년, 중국),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3국간 연락체계 구축 등에 합의함.

■ 과학·기술·환경 분야

-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제2차 한·중·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2009년에 일본에서 개최하여 동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.
- 환경과 관련해 3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황사방지에 관한 공동연구 및 대기환경 영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, 해양쓰레기 방지, 철새보호를 위한 조사 및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지를 위한 협력 증진에도 뜻을 모았음.

■ 사회문화 분야

-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해 먼저 현재 양자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안 수색구조를 3국간 협력체제로 확대 모색하기로 하고, 올해에 이어 한·중·일 보건장관회의 및 국책연구기관 포럼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.
- 3국간 청소년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년 중국 및 일본의 청소년 각 100명을 한국에 초청하기로 하고, 3국 청소년 우대카드

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함.

- 또한 한·중·일 3국이 공동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(전시회, 공연, 영화 등)를 개최하는 문화서틀사업을 지속 시행하기로 하였음.

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

- 국제무대에서 3국간 협력과제로는 먼저 동북아 평화안정 및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음.
- 지난 12월 1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는 3국간 대아프리카 정책대화(Trilateral Policy Dialogue on Africa)를 지속 추진하여 3국의 대아프리카 원조정책 및 평화지원 등과 관련한 상호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할 것에 합의함.
- 또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유엔 개혁 등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.

표 6. 한·중·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

영역	세부내용
협력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국 내 별도 정상회의 정례 개최 • ASEAN+3 계기 3국 정상회의도 병행 개최 •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차관보회의 정례 개최 • 사이버 사무국(웹사이트) 내년 개설
경제통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FTA 민간 공동연구 심화 •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• 비즈니스 환경개선 액션 어젠다 채택 •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지속 • 금융관계 부처 및 중앙은행 등 간 협력 지속 • 제3차 한·중·일 물류장관회의 내년 중국 개최 •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3국간 연락체계 구축
과학기술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2차 한·중·일 과학기술장관회의 내년 일본 개최 • 황사방지에 관한 공동연구, 역내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협력현황 평가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 •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증진, 겨울철새 공동조사 및 고병원성 조류독감 연구 협력 강화
사회문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안 수색구조 분야 3국간 협력체제로 확대 • 제2차 한·중·일 보건장관회의 내년 중국 개최 • 제2차 한·중·일 국책연구기관 포럼 내년 중국 개최 • 내년도 중·일 청소년 각 100명 방한 초청 및 3국 청소년 우대 카드 도입 논의 • 3국간 문화서틀사업 지속 시행
국제무대에서의 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자회담 과정 추진노력 경주 • 군축/비확산 노력 경주 • 3국 국장급회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 지속 • 대(對)아프리카 정책 대화 •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유엔 개혁 등 관련 협력 지속

4. 평가 및 향후과제

■ 이번 한·중·일 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음.

- 첫째, 3국간 최초의 별도 정상회의 개최 및 정례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한·중·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
○ 이번 한·중·일 3국 정상회의는 그동안 ASEAN+3 개최시 옵서버로 참가하여 추진되었던 한·중·일 정상회담과는 달리 역내 자발적인 3국 정상회의로 발전된 데 큰 의미가 있음.

○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둘째, 경제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대화채널을 가동함으로써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.

○ 동아시아 금융협력, 동아시아 통화협력 등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,

○ 3국간 외교장관회의 및 차관보 회의의 정례화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정례화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, 한·중·일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.

- 셋째,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3국간 협력 필요성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양자 또는 3자간 협력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며, 이는 향후 3국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.

○ 통화스왑, 양자 또는 3자간 FTA 및 투자협정 등의 경제협력 사업은 향후 3국간 정상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역내 협력과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.

■ 반면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3국간 협력체계가 완전히 체계화되기까지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음.

- 특히 동북아정세는 북핵문제, 마북 및 일북 관계 진전 등의 북한 변수와, 미국 및 일본 지도부의 정책 방향 및 태도변화 같은 요인들로 인해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,

- 3국간 정치체제의 차이, 과거사 문제,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관계 등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협력추진의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■ 따라서 향후 한·중·일 정상회담의 순항과 역내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의식과 리더십이 중요한바, 향후 정상차원의 정례적 접촉과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동북아 평화질서 창출을 위한 공동의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.

- 과거사문제 등으로 남아 있는 국민적 감정을 완화시키고 상호 협력과 공존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한·중·일 3국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.

■ 한·중·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정부는 3국간 협력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모색해나기야 함.

- 중국과 일본은 상호 경제 및 군사적 측면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으므로 중견국가인 우리가 이 국가들을 협력의 틀로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며,

- 특히 내년에 설립될 한·중·일 3국 협력의 사이버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, 더 나아가 이를 공식적 사무국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.

- 또한 우리가 중국과 일본 간 경제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과의 양자 FTA 체결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-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공동체 의식의 배양과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, 우리가 한·중·일 3국의 '문화의 용광로'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협력을 강화하고 3국 국민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.

■ 한·중 FTA, 한·일 FTA 및 한·중·일 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상황으로 인해 조기 추진이 어려우므로 산관학 연구를 촉진시키고 3국간 투자관련 협정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3자간 FTA 체결에 관련하여 중국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, 한국과 일본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민간수준의 공동연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.⁵⁾

5) 양자간 FTA의 경우 한·일 FTA는 2004년 11월에 협상이 중단되었으나, 최근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양측 정부 실무자간 협의가 개최(12월 4일, 서울)되는 등 협상재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, 한·중 FTA

- 한·중·일 3국간 FTA 및 양자간 FTA는 각 국가별 상황이 다르므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FTA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되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현재 정부간 협상이 진행 중인 한·중·일 투자협정의 경우에도 한·일, 한·중, 중·일 간 투자보장 협정 등 양자간 체결된 투자 관련 협정을 3국간으로 확대하여 투자보장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와 촉진에 중점을 둔 규정을 논의 중에 있음.
- 3국간 투자협정이 선 체결되면 투명한 제도적 환경 및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 제공으로 투자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3국간 FTA 체결논의를 가속화하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큼.
-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역내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간 전략적 교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.
-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과 관련해서는 세부 협력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
- 내년 개설 예정인 사이버 사무국이 각 협력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율 등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.
- 또한 향후 에너지, 환경, ODA와 같은 분야에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 매우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. **KIEP**

의 경우 지난 5월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된 상황임.